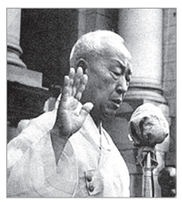
# 정부지원 기도회·성시화·교황 '알현'까지

종교편향 반세기

## 2. 반복되는 종교편향史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 ▌미군정 – 이승만 정부(1945~1960)



한국사회에서 종교 차별은 광복 이후 미군정 시기(1945~1948)부터 시작됐다. 기독교 국가를 지향했던 미군정은 노골적으로 기독교계 우대 정책을 폈다. 일본이 남기고 간 종교적산(敵産) 대부분을 당시 전체 인구의 0.5% 밖에 되지 않던 개신교에 대부분 불하했고 그 자리에 교회와 학교 등 수백 개의 기독교 시설이 들어섰다.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제도적 특혜도 제공했다. 1975년에야 부처님오신날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됐으니 30년의 시간격차가 있었던 것이다. 또 공영방송인 서울방송을 통해 일요일마다 선교방송을 내보내는 등 기독교 우대정책을 펼쳤다.

미군정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국가를 방불케 할 만큼 친기독교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헌법에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한 채 국기배례를 주목례로 바꾸고 제헌의회의 시작과 초대 대통령의 취임선서를 기도로 시작하는 등 국가의전을 기독교식으로 치르는 관례를 만들었다.

원조 물자 배분 과정에서 기독교계에 특혜를 줘 교육, 복지 분야에서 기독교계가 단시간에 물적 토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승만 정권에서 19개 부처 장을 역임한 153명 중 개신교 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7.7%에 달했다. 각종 특혜와 지원으로 기독교계는 빠른 시일 내에 물적·인적 자산을 광범위하게 축적했다.

### ▌박정희 정부(1961~1979)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막을 내렸지만 당시 만들어진 기독교 기반은 박정희 정권 때 폭발적인 교세성장으로 이어졌다. 거대집단이 된 개신교는 정치적 활용가치가 큰 세력이 됐다.

박정희 정부 기간 만들어진 조찬기도회를 통해 개신교 지도자들은 고위공직자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고 이 같은 교류를 통해 개신교계는 어려 측면에서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받았다. 사실상 정부지원으로 국가조찬기도회 같은 초대형 전도집회가 여러 차례 개최됐다.

반면 불교에 대해서는 이전 정권에서 수립된 악법들을 활용해 교묘하게 통제했다.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원칙을 위배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불교재산관리법, 자연공원법 등을 제정해 불교재산 관리주체가 불교계가 아니라 정부라고 명시했다. 1968년 사찰을 관광지화 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정작 문화재 예산은 사찰에 배정하지 않아 불교문화재는 황폐함이 더해갔다.

### ▌전두환 노태우 정부(1980~1992)


불교지주 장기바이
원각사에
목어각성
목구수성
북
제5공화국 폭력정권 퇴진 민주헌법 쟁취 범국민대회